‘박지원 청문회’ 여야 극과 극… “적임자” vs “적과 내통”

민주당, 국정원 개혁 · 인혁당 사건 배상 등 주문
통합당, 학력 위조 의혹 대북관 등 다각도 공세
朴후보자, 탈북민 재입북에 “재발 않도록 각성”

27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국정원 개혁의 무난한 마무리를 주문하는데 중점을 둔 데 반해 야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및 대북 송금 관여 의혹, 대북관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관련 의혹 제기에 집중했다.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달린다”며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 번 학력 위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졸업하려면 160학점을 따야 한다”며 “전공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다. 교양필수 학점은 35학점, 전공선택과목은 53학점만 인정돼 토탈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으로,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대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후보자께서 전향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해소하고 억울하고 의심받고 있는 것을 해명받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 제출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낳은 5000만원 차용건도 의심을 샀다.

이철규 의원은 “2005년 3월달에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후보자께서는 1억4000만원 정도의 예금자산과 5000만원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계셨고, 또 1년 후에 차용하고 난 다음 불과 4개월 후 자산 내역을 보면 예금도 한 1억원 정도 남아있고 현금자산도 5000만원이 그대로 다 있다”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의 대북관을 우려하면서 정권 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조태용 의원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며 “또 다시 불법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대북관도 쟁점이었다. 주호영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적과 내통한 증거로 ‘4 · 8 남북합의서’의 비밀 합의서인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은 물론 서명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주 의원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부터 25억달러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서명도 (박 후보자의 사인과) 똑같다. 이런 문건에 서명한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사인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모략을 보수층으로부터 또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으로서의 개인 신상과 자격, 자질 등에 초점을 둔 공세를 펼친 것과 달리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의 마무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과거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간첩 조작, 또 국내 정치 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이다,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면 국정원을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에 국정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국정원의 통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의 60년 역사의 공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과 개혁 이후의 나아갈 방향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후보자를 향해 적과 내통한 것으로 폄훼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내통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이면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는 것을 이야기할텐데 남북회담이나 이런 것을 (내통이라고) 치면 과거 7 · 4 남북공동 성명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시절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내통이라고 이야기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관련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들(피해자)이 모두 무죄 판결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배상금 420억원이 지급됐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손해배상금의 방식이 바뀌면서 다시 22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반환을 안 한다고 해서 이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부동산경매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해결책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최근 탈북민 재입북 사건에 대해선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저희들도 각성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덜고 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호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秋, 野 ‘아들 군 휴가 미복귀’ 공세에 “소설 쓰네”…법사위 파행

통합당, 아들 군 휴가 연장 의혹 제기
野 자료 요구에 與 “청문회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7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통합당 의원들 추 장관 아들이 과거 군 복무 때 휴가 복귀날짜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가 날짜까지 연장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추 장관이 “소설”이라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날 오후 법무부, 법제처,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의혹은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6월 초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상급부대의 처음 보는 대위가 나타나 아들의 휴가를 연장해줬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기록과 부대 출입 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자료제출 요구에 상대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받아치며 분위기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이어 야당 간사인 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군형법 위반 여부가 걸린 문제”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자,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은 이미 전역해서 민간인 신분이고 고발돼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아무 사유 없이 갑자기 휴가를 연장해준다는 것은 없다고 본다. 누군가가 부탁을 했든지, 청탁을 했든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연장이 됐다고 본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울 동부지검장을 맡은지 3개월여 만에 법무부 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에게 “지금 동부지검장이 공석인데”라고 말하자 이 질문을 듣던 추 장관이 마이크를 켠 채 “소설을 쓰시네”라고 껴들었다.

이에 윤 의원은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은가”라며 “국회의원이 물어보는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소설가인가, 국회의원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 · 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